

초과 연장근로에도 수당은 없었다 노동부, 위반업체 49곳 무더기 적발

교대제 제조업 사업장 45곳 점검
전 사업장서 243건 법 위반 적발
항공사 4곳서도 18건 위반 확인
해당 업체들에 시정지시 등 내려

교대제를 운영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근로 계획감독 결과,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대제 제조업 사업장 45곳을 대상으로 한 계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계획감독은 장시간 노동이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진행됐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등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사업장을 선별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를 함께 들여다봤다. 그 결과 45개 전 사업장에서 총 243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현행 주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곳은 24개소(53.3%)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1곳은 교대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었으며, 특히 야간 근무조에서 한도 초과 사례가 집중됐다.

에너지저장장치 제조사 A사의 경우 업종 전환 과정에서 생산 불안정을 이유로 159명(사무직 133명·생산직 26명)이 38주간 평균 4.7시간씩 연장근로 한도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고용노동부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않은 사업장도 29곳(64.4%)에 달했다. 체불된 수당 규모는 총 22억3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5곳(11.1%) ▲보건·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24곳(53.3%) ▲안전보건교육·관리체계 미이행 29곳(64.4%) 등 산업안전 분야 위반도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전액 지급을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절차에 착수하고, 총 1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항공사에 대한 계획감독에서도 위반

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7~8월 '익명제보센터'에 객실 승무원 근로기준 위반 제보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항공사 4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4개 사업장 모두에서 총 18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3곳은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1곳은 기간제 승무원에게 비행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차별 사례가 있었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승무원의 시간외 근로 한도 초과도 2곳에서 적발됐다.

노동부는 해당 항공사들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객실 승무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노동부는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장시간 근로감독대상을 200개소로 확대하고, '위라벨+4.5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적 개선에 나서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의 장려금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교대제와 심야 노동, 특별연장근로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분명히 확인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기후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대비

'전력계통 혁신대책 TF' 출범 회의

향후 5년 내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수용을 위한 '전력계통 혁신대책'이 올해 수립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24일 서울 비즈센터 5호점에서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열기 위한 '전력계통 혁신대책' 전담반(TF)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후부는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지산지소형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지역 간 유통선로를 보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다만 신규 송전선로는 건설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전력망 제도·운영·건설 전 분야의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우선 제도 분야에서는 계통 여건을 고려한 권역별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계통 지도를 마련한다. 또 수도권 등 계통 여유 지역 내 재생에너지 신속 보급을



경기 화성시 송산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 /뉴시스

위한 계획 입지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재의 선착순 선점 방식의 계통 접속 방식을 개선한다.

운영 분야에서는 기존 전력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력망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 유연접속을 확대한다. 아울러 '전력망 비증설대안'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건설 분야에서는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력망 건설 물량 대응을 위한 건설 방식을 다변화한다. 또 국가기간방 경과지 주민 태양광 사업 지원 등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중부발전, 보령에 수전해 수소기지 착공

2.5MW급 규모... 年 395톤 수소 생산

한국중부발전이 충남 보령에서 수전해 기반 정정수소 생산 시설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석탄발전소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연계형 수소를 생산하는 모델로, 에너지 전환의 상징적 사업이라는 평가다.

중부발전은 23일 충남 보령시 신보령 발전본부 내에서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충청남도·보령시와 함께 현대엔지니어링, 테크로스워터 앤에너지, 아이에스티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다.

사업 규모는 2.5MW급이다. 물에 전기를 가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방식으로, 완공 시 연간 약 395톤의 정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소' 약 7만9000대를 완충

할 수 있는 물량이다. 생산된 수소는 보령시 내 수소충전소에 직접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현대자동차와 협력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고분자 전해질막(PEM, Proton Exchange Membrane) 수전해 설비를 도입, 실증에 나선다는 점이 주목된다. 중부발전은 국산 수전해 기술의 성능과 경제성을 입증함으로써 외산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부발전과 현대차는 전략적 협업을 통해 보령시 수소충전소에 전국 최고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한 수소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타 지역 수소차 이용객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내 식량·관광 등 연관 산업 소비를 촉진하는 등 수소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계란 가격 전주比 15%↑

계란 한판 당 1000원 할인 연장

계란 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하면서 설 연휴 후에도 전주보다 가격이 15% 상승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 계란 한판 당 천원씩 할인 지원을 연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6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채소류는 전반적으로 공급 여건이 충분하고 가격도 낮은 수준을 보여 당분간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달 평균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출하량이 늘고, 도·소매가격에도 순차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2~18일 주간 기준 특란 30개 가격은 6954원으로 전주 대비 15.0% 상승했다. 정부는 설 할인지원 종료 이후에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4일까지 30구당 1000원 할인 지원을 연장한다.

이날 회의부터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한다. 각 부처는 가격 상승 정도, 민생 영향, 독과점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점검 폭목을 선정하고 상반기 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진청, 온실 빛 보충 기술로 딸기 생산량 안정화 돕는다

'광량 보상 동적 보광 시스템' 개발
흐린 날 광 확보량 최대 3배 늘어

온실 내부 빛의 양을 자동으로 보충해 주는 기술이 개발됐다. 이는 딸기 시설재배 농가의 저일조 피해를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은 온실 내 부족한 빛을 자동으로 보완하는 '광량 보상 동적 보광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에서 효과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비와 흐린 날이 잦아지면서 온실로 유입되는 자연광이 감소하고 있다. 딸기의 경우, 개화기와 초기 생육 단계에서 일조량이 부족할 경우 수확이 지연되고 출하 물량 감소로 이어져 농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전남 담양의 일조시간은 411.1시간으로 평년대비 20% 줄었고 딸기 출하량도 37% 감소했다.

보광 시스템은 온실 내부 광도를 센서로 실시간 측정해 목표 수준에 미달할 경우 발광다이오드(LED) 보광등을 자동으로 가동하는 방식이다. 자연광이 충분할 때는 조명이 꺼져 에너지 낭비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딸기를 고르고 있다. /뉴시스

최소화할 수 있다.

충남 논산 농업기술센터 실증 온실에서 '설향' 품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험 결과, 시스템 적용구역의 하루 평균 광도는 대조구역보다 45% 높았고 일적산 광량도 44% 증가했다. 흐린 날에는 광 확보량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광 환경 개선은 생육과 수확 시기에 도 영향을 미쳤다. 적용 구역의 딸기는 첫 개화가 8일, 첫 수확은 16일 빨라졌으며 12월부터 1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대조 구역보다 23% 증가했다.

농진청은 이번 기술이 저일조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생산을 가능케 해, 출하 시기 조절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해수부, 10년 만에 국내 해양지도 개편

지도 확대, 12단계로 세분화
수시 갱신, 지도 종류 단순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바다 지도 서비스를 새로 개편해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해양공간 정보포털 '개방해(海)'와 해양안전 앱 '안전해(海)'에서 지원한다.

우선 지도 확대 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12단계로 세분화해 수심 정보와 해저 장애물 등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항로표지 등 해양정보 갱신주기를 기존 분기 단위에서 수시로 전환했다. 이용 빈도와 활용성을 고려해 지도 종류를 기존 7종에서 ▲기본맵 ▲전자해도 ▲영상지도 등 3종으로 단순화해 이용 편의성과 제작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바다지도에 직접 수록돼 있던

항로표지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 분포하고 위치 변경도 잦아 지도의 가독성이 떨어지고 최신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항로표지를 별도 아이콘으로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정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해는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바다지도와 해양공간 계획 정보, 해양공간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국가 해양공간 정보 통합 플랫폼이다. 안전해는 각종 해양활동에 필요한 해양 안전 정보 및 긴급 신고 기능을 제공하는 해양 안전 앱이다.

개방해와 안전해는 현재 350여 개 이상의 공공·민간 웹과 모바일 앱에서도 연계·활용되는 대표 바다지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10년 만에 이뤄졌다. /세종=김연세 기자